

‘전대미문’ 초저출산에 국민연금 소진시기 다시 계산

2021년 출산율 0.86명으로 추락
2067년 생산연령인구 절반 줄어
40년후 보험료율 29.3% 부담해야

정부가 초저출산이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과 미래 보험료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다시 해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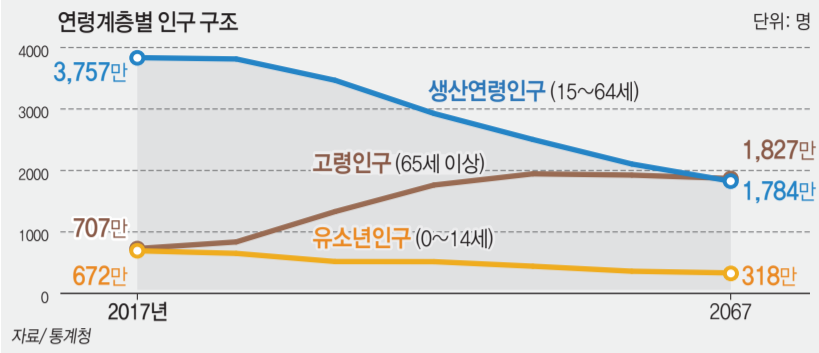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계청의 특별 인구추계 결과를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지난달 28일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를 통해 출산율이 2021년 0.86명으로 추락하고 50년 뒤에는 생산인구가 현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8월 5년마다 이뤄지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끝냈지만 핵심 변수인 인구전망이 새로 나오에 따라 정식 계산과 별도로 고갈시기 등을 서둘러 재검점하겠다는 계획이다.

통계청의 특별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67년 1784만명으로 2017년의 47.5% 수준에 머문다. 2016년 추계에서는 2065년에 2062만명 일 것으로 보인다.

장래인구특별추계 주요 내용



고령인구비중이 40%를 넘어서는 시점은 2051년으로 기존 추계보다 3년 앞당겨졌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에는 120.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추계는 중간 수준의 출산율에 따라 전망한 중위추계로 지난해 0.98명이던 출산율이 2021년 0.86명까지 떨어진 후 2040년 1.27명까지 회복해 이후 비슷한 수준이 이어진다는 가정을 전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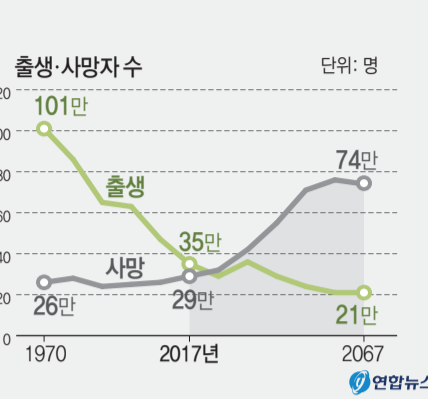
복지부는 앞서 4차 재정계산 당시에 통계청의 2016년 ‘중위추계’를 ‘기본’으로 채택했다. 출산율이 2015년 1.24명, 2030년 1.32명을 거쳐 2040년부터 1.38명을 유지한다는 가정이었었는데 현실적

이지 않았다. 2017년 출산율이 이미 1.05명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2개 시나리오를 추가로 검토했는데, 출산율이 2015년 1.24명, 2020년 1.10명, 2040년 이후 1.12명으로 전개되는 ‘통계청 저위추계’와 출산율이 2016년 이후 1.05명으로 유지된다는 ‘1.05명 추계’였다. 현재 보험료율 9%, 거시경제변수, 기금투자수익률 추정값에 세 가지 전망을 각기 대입한 결과,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 시기는 2057년, 적자 전환 시기는 2042년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서는 크게 차이가 났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부과방식 비



율’이라고 하는데, 2060년 기준으로 26.8%(중위추계), 28.6%(저위추계), 29.3%(1.05명추계)로 계산됐다.

약 40년 후에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제도 존속을 위해 26.8~29.3%의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추계에 따라 2.5%p 격차가 났다.

통계청의 이번 특별추계는 기존보다 전망이 더 비관적이기 때문에 부과방식 비용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김용하 위원(순천향대 교수)은 최근 ‘2019년 인구추계에 기초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부과방식 비용률은 2060년 30.3%로 올라간다. 복지부의 기존 추계와 비교하면 최대 3.5%p 차이가 난다.

2060년 보험료 수입은 기존 인구추계를 반영했을 때보다 10.8% 감소하고, 2070년에는 15.2%, 2080년에는 19% 더 줄어든다는 전망도 나왔다.

복지부는 다만, 김 교수의 전망은 정부의 공식추계가 아니라 개인의 연구모형을 사용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새로운 인구추계가 나왔으니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경제활동 참가율 등 경제변수까지 새로 분석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해볼 예정”이라며 “저출산이라는 방향성은 유사하지만,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작년 말 4차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개편안은 ▲현행 유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 인상 등을 4 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文, 新성장동력 찾아 중앙亞 3국 순방

7박8일 우즈베키스탄 등 국민방문
러·유라시아 비릇 신북방정책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 국민방문을 위해 16일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중앙아시아 3국 국민방문은 7박8일간 일정이다. 더욱이 이들 3국은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에서 중요한 협력국으로 꼽힌다. 신북방정책은 이들 3국을 비롯해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미국·중국(G2)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해 구루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후 우리기업이 수주해 완공한 투르크메니스탄 최초 대규모 가스화학플랜트인 ‘키야리 플랜트’ 현장을 찾는다.

투르크메니스탄 순방 후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한다.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미르지오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신북방정책 비전 관련 의회 연설을 진행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3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순방한다. /연합뉴스

우즈베키스탄 순방 후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한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서 독립운동가 계몽우·황운정 의사 유해 봉환 행사에 참석한다. 또 카심조마르트 토크야예프 대통령-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등과의 면담을 통해 과거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노후를 공유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브리핑 때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4위의 자원 부국”이라며 “우리나라와는 대규모 플랜트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이번 (문 대통령) 국민방문을 통해 에너지, 교통, 물류,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최대인구를 가진 나라로, 연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신흥 경제국”이라며 “이번 국민방문을 통해 보건 의료, ICT,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카자흐스탄 국민방문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의 10주년을 맞아 성사됐다. 교통 인프라, ICT, 우주항공, 보건 의료 등 제반 분야에서의 우호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도 공유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노동부, 예술인 등 직업능력개발지원 가능해 진다

예술인, 프리랜서(자유계약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창업으로 4차혁명 경쟁력 강화를”

민주연구원, 혁신적포용노선 보고서

4차산업혁명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 민주연구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혁신적 포용노선’ 보고서를 통해 “국가혁신시스템 3.0 시대에선 ‘스타트업 네이션’과 ‘유니콘 네이션’을 지향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계혁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연구개발자본·인적자본·연구역량·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등이 상위권에 속한다. 다만 기반·자원은 잘 갖춰져 있으나 제도 부분은 20위권 밖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성과’ 부분은 우수하지만, ‘지식확산’과 ‘파급효과’ 등을 마련한 제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란 게 기관 평가다. 실제 주요 선진국의 경우 신기술·신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지 않고, 국가혁신전략을 세워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제도 개발 부분에 중점을 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제조업, 일본은 로봇, 미국·영국은 ICT, 이스라엘은 항공·우주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의 경우 4차산업혁명 관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은 국가는 ‘창업’이 신성장동력이라는 평가를 냈다. 다만 한국의 창업유형은 혁신형(21%)보다 생계형(63%)에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 중 일반기업의 3년 생존률은 26%인 반면 혁신형 창업은 50%에 이른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임종헌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무죄임을 강변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으로 의심받고 있는 자신의 행동에 “썸만 탔는데 불륜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5일 저녁 늦게까지 공판을 열어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법원행정처에서 2013년 10월에 작성한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실명자료’를 제시하면서 대법원이 법관파견을 성사시

키기 위해 정부를 설득했고, 그 과정에서 강제징용 사건의 재상고 절차에서 외교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이 기존에 없던 ‘참고인 의견제출제도’를 도입해 외교부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재판부에 접수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점을 들면서 ‘법관 파견제도’와 거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재외공관 법관파견제도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외교부 역시 ‘두 가지를 연계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